

금속노조, 11기 1년 차 예산안 승인·감사위원 선출

51차 정대 모바일 투표 참여율 94.6% ... 20일쯤 중앙위 열어 사업계획·교섭방침 등 논의



◀ [자료사진] 금속노조가 3월 31일 5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11기 1년 차 사업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위원 여섯 명을 선출했다. 금속노조가 2019년 2월 25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10기 2년 차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금속노조가 3월 31일 5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11기 1년 차 사업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위원 여섯 명을 선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모바일 투표에 재적 대의원 694명 중 657명이 참가(투표율 94.6%)했다. 561억 원 규모의 11기 1년 차 예산안에 대의원 606명(찬성 92.2%)이 찬성해 원안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11기 노조 일반명부 감사위원으로 ▲기호 1번 문윤환(현대차지부, 찬성 79.1%) ▲기호 2번 전경호(현대차지부, 찬성 79.0%) ▲기호 3번 김규진(현대중공업지부, 찬성 83.5%) ▲기호 4번 전성중(현대차지

부, 찬성 80.5%) ▲기호 5번 최순영(한국지엠지부, 찬성 82.2%) ▲기호 6번 김홍규(현대차지부, 찬성 83.1%)를 선출했다. 여성명부 감사는 52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14시부터 20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14시에 대의원들에게 모바일 투표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이어 15시와 17시, 19시에 각각 미투표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 회의 자료집을 대회 열이틀 전에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대의원들이 투표 전에 11기 1년 차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대회 일주일 전에 안전 설명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감사위원 후보

공보물을 지부를 통해 배포하고, 후보 유세 영상을 게시해 대의원들이 공약을 살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조는 이번 정기 대대에서 다루지 못한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교섭방침 등을 오는 4월 20일쯤 중앙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우선 집행하고, 5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승인받을 예정이다.

노조는 51차 정기 대대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23일 대의원대회를 전격 연기했다. 코로나 19 감염자가 하루 1,000여 명 이상 갑작스럽게 늘면서 취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노조는 3월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기 대대 개최 방식을 논의해 3월 31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대의원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재난 틈타 재벌 세상 만들려는 경총(蟲)

무제한 해고·쟁의 무력화·장시간 노동 등 요구 ... 민주노총, “모든 해고 금지·노조파괴 법제화 중단”



민주노총이 코로나 19 재난 상황을 틈탄 재벌 체제 강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보수언론을 앞세워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경영체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3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 악용 재벌체제 강화 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은 “재벌들에게 코로나 19라는 국가 재난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뜯 또 한 번의 기회, 총수 일가 지배 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 금지와 임금 삭감 기도 중단 ▲비정규직 확대와 노조 파괴 법제화 기도 중단 ▲노동자 민중에 재난 생계소득 지급 ▲총수 일가 지배 체제 강화 시

도 중단과 경총 해체 등을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전화를 위한 경영계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등 유연 근로시간만 반영 ▲쟁의행위 시 시설 점거 금지와 대체 근로 허용 ▲경영상 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경우’로 완화 ▲원청 안전보건 조치 의무 축소 ▲근로시간 위반, 파견허용업무, 파견 기간 위반 형사 처벌 폐지 또는 축소 ▲경제인 경제범죄 가중 처벌 기준 완화 등이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입법 요구는 재벌 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요구를 통틀어 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국가 재난을

틈타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에 묶어 두려고 한다며 “더는 희생을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박석은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에 맞서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운 국민에게 재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추세”라며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기업에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는 생활고와 과로 등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재벌과 경총은 자기 배만 불리려는 요구나 하고 있다. 경총은 즉각 해체하라”라고 분노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 간사는 “경총은 회사 법인 조직률이 0.7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입장만 대표하는 경총은 입법 요구안을 철회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